

민주, 힌남노 피해 우려에 “여야, 피해 지원에 머리 맞대자”

“추석 앞 고통 클 것”...지원 촉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우려하면서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난재해로 인한 불평등 해소, 일상 회복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날 오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문제는 태풍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느끼는 고통

이 클 것”이라며 “수해 복구를 신속히 해야 한다”, “폭우와 태풍 피해·추석 물가 상승까지 쌓인 국민 고통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 피해 지원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 피해 국민들 일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회복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피해 지원 정책에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포항제철소에 불이 났고 제주 남동부 지역 일대 태풍 피해가 매

우 크다”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풍은 지역과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 더 강한 태풍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강득구 의제부대표 또한 힌남노 상황과 관련해 “최종까지 정부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주 민생부대표는 “지난 8월 폭우 피해가 회복되기 전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을 21대 정기국회 22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재난 재해로 발생하는 불평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민주, 이재명 불출석에 “출석 전례없는 일...기소에 대비”

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의원총회서 의견 모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 예정일이었던 6일 아침까지 고심한 끝에 조사가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소환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불출석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 대표도 이를 고려했다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출석 결정을 전날 밤에 내렸는지 또는 이날 아침까지 고심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지난 5일 검찰에 답변서를 통해 서면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으며 이 대표의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당 차원에서 전날 긴급 의원총회로 사안을 다루기도 했다. 이에 안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의원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출석 요구가 터무니 없는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쟁했던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해 87년 이후 이렇게 소환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취지의 불균형에 대한 말이 많았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출석 요구를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 많았다. (이 대표가) 이런 요구를 감안해서 결정하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통상 일반인들도 고발 당

하면 소환조사를 당하는데 당 대표라는 이유로 서면조사만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근대 답변이 늦었다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일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하는 건 일반적인 수사관행에 벗어나는 것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소될 상황을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 절차를 거쳐서 서면조사하거나 혹은 출석 요구한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비해야겠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이 이 대표 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데 민주당이 당 차원으로 대응해 적절치 않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를 당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대표를 정치적 목적 갖고 소환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형태로 보이는 건, 야당 탄압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던 수사 쟁점에 대한 설명도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백현동 의혹에 관해 “2014년 말까지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

시에 용도 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았다며 위협한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언론 취재 및 수사기관 제출 확인서 존재, 국토부·성남시 간 질의 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을 일할 적 백현동 용도 변경이란 중대한 사안을 두고 중앙부처의 협박에 결정을 내린 것은 관측하는 질문에 “경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가 이런 요구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경위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련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소명서 제출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단 요구를 받아 들여놓고 협박을 당했다는 답변이 공색하다는 지적에는 “성남시는 필요가 달라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국토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백현동과 대장동 의혹, 김모 처장 등과 관련한 과거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김재한기자

與, 주호영 비대위원장 고사 내일 비대위 출범 ‘삐걱’

새 비대위원장에...정진석 김태호 홍문표 의원 등 거론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비대위원장 취임을 고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과 자신의 거취 표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찾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정진석 김태호 홍문표 의원 등이, 당 외에선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주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 맡아달라는 제안 받았지만 제가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전날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인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주호영 체제’가 다시 출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차 비대위 전원 퇴진을 시사한 셈이다.

주 전 위원장은 새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의원이 의원

과 당원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도 잘 알고 국민적 신망도 있는 분,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을 잘 하실 분이 모셔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예고한 7-8일 새 위원장 발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질문에 “직접 여쭙보는 게 좋다”면서도 “늦춰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주 전 위원장의 고사 기자회견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아꼈다. 그는 주 전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으로 주 전 위원장과 같이 직무가 정지될 위험이 존재하는데다 물론 비대위원장 위상과 권한, 임기가 모호해 유력한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전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관계, 정치적 리더십 등을 이유로 후보로 언급되지만 비대위원장 보다는 권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대표 선거 또는 비대위 이후 당대표 선거 도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